

# K-해상풍력, '기술·수주·정책' 삼박자 맞춰 글로벌 성장 도약

HD·LS·두산, 해상풍력 기술 확보  
변전소·케이블·터빈 성과 가시화  
내년 3월 정부 대책 시행으로 탄력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 기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발판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LS전선·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은 해상변전소와 해저케이블, 대형 터빈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500메가와트(MW)급 해상변전소에 대한 국제 설계 검증서를 획득했다. 이번 모델은 국산 기재를 적용한 표준 설계로 14MW급 풍력발전기 35기의 전력을 송출할 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에너지빌리티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600억 원 규모의 '포모사4'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따내며 10회 연속 수주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9년 첫 진출 이후 대만 정부의 상용화 1단계 모든 사업(8건)을 수주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자회사 LS마린솔루션도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확보하며 국내 시공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입찰을 계기로 대형 해상풍력 터빈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5년 풍력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현재까지 347.5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국내에 공급했으며 제주 탐라(30MW)·전북 서남해(60MW)·제주 한림(100MW)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최초로 10MW급 해상풍

력 모델에 대한 국제인증 취득했다. 다만 글로벌 선도 기업인 GE·지멘스·베스타스 등이 14~18MW급 대형 터빈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다.

정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지제도를 비롯해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해 국내 풍력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글로벌풍력에너지협회(GWEC)는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전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가 연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은 커지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기술력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의 핵심 경쟁력이 터빈·하부구조물·부유식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돼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변전소·케이블 등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터빈 분야 기술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은 탄소감축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국내 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기술보다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 단지 조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터빈뿐 아니라 케이블·변전소 등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 김병기 "배임죄 손보겠다"... 손경식 "노조·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여의도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  
與 "기업자유 보장, 형사책임 합리화"  
경총 "노란봉투법·상법 보완 시급" 지적  
정년 연장 등 민감 현안논의 반영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6단체 대표단과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 면담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면담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제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라며 "새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계는 법 개정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의 말씀 취지는 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성격으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며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거나 법정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새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도전적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같은 중요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반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 의료기술 혁신·산업 융합... 제약업계, 새 성장 동력

>> 1면 '고난도 기술부터...'서 계속

망막 영상뿐 아니라 혈압, 지질 수치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이 대표는 "닥터눈은 혁신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며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신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국내 의료기기로는 처음 미국 FDA의 드 노보(De Novo) 승인을 획득한 오큐클을 보유한 리



'닥터눈 CVD'

/메디웨이

센스메디컬과 차별화된 성장동력 마련에 나섰다. 리센스메디컬은 급속정밀 냉각기술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냉각 치료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양사는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서 체형 연구 등을 추진한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점차 국내

기술력 독점, 국산 제품 개발 등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약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의 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는 공동 연구개발 등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에 기업 반발 확산

>> 1면 '기술탈취 증거개시제...'서 계속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

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